

# 광주시의회, 말 많던 정책자문관제 손본다

## 시 규정보다 상위 조례 제정 검토 시정·인사 개입, 기밀유출 방지

그동안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광주일보 2월1일자 5면>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손질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도 운용의 근거인 시 규정의 상위 법령으로 조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자문관 제도는 광주시가 지난 2009년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정책자문관 운영규

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7~8명이었던 규모가 15명으로 늘고 시정 내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6㎡ 규모의 별도 사무공간까지 마련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자문관실에 600만원이 넘는 TV 세트 등 호화로운 비품을 지원한다며 공무원 자료 협조 규정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나 기밀유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자문관에 따라 상당수 내부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촉·운영중인 정책자문관은 대외협력, 민자도로, 중국교류협력 등 15개

분야 15명이다. 특히 부당한 시정개입 등 의혹과 구설을 낳으면서 공조적 기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부 자문관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공무원에게 막말했다는 의혹을 광주시의회 주경남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주경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질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관제를 정작 시정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자문관에서 지급하는 자문비용도 자문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자문관이 인사에 영향

을 미친다는 등 설이 시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월권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자문관실 존치 여부를 포함해 자문 실적과 성과를 DB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료 외부 유출 지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훈령을 개정해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인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FTA 피해직접금 신청 전남도, 내달 29일까지

전남도는 1일부터 다음달 29일까 FTA 피해보전직접금·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직접금 대상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으로서 당근과 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또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신안 '섬소리 법정' 첫 재판 인천시 웅진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군 단위 법원이 없는 2곳 중 한 곳인 신안군에 법정이 설치돼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지원장 장용기)은 지난 31일 신안군 비곡면사무소 2층에서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 광주 자동차산업협의회 사단법인 전환 발기인 총회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지원조직인 광주 자동차산업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재단법인 광주근로자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최근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사단법인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을 제정했으며, 회장으로 진흥원 노성경 본부장을 선임했다.

협의회는 설립허가를 받고 나서 법원에 등기하고 자동차 정책 포럼, 시장개척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양당 체제 재편...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될까

### 더민주, 이달까지 마무리 하반기 의장선거 변수로

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구조로 재편되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교섭단체는 4인 이상이면서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의회 제1당인 더민주는 우선 이달중 교섭단체 구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더민주 소속 13명 의원 중 12명은 전남 모임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일부 의원 1~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의원 간사를 맡고 있는 전진숙(복구 4)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서 받아 가는 등 교섭단체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일부 의원의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교섭단체 구성을 찬성하고 있어 6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의장에게 교섭단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성이 완료되며 방도 배정 받는다.

반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소극적인 반응이다. 이는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숙적으로 열세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소극적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21명 전원이 더민주 소속이었던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 선거가 치러졌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원내1당으로 의석수에 따라 원구성을 하는 국회 방식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현 의장파를 비롯한 국민의당 주류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6월 정례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더민주가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소극적인 국민의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시·군 택시 부제 연내 해제 전남도 "100원 택시 이용자 불편 해소"

오지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 사업을 도입한 전남 일선 시군이 이르면 금년내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100원 택시 이용자들이 택시 부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일선 시군과 협의해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한 일부 시군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이 있는 일선 시군과 협의해 가능한 한 금년내에 택시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한 읍면으로 제한된 100원 택시 이용 구역을 가능한 한 금년내에 확대하기로 했다.

시 이용 구역을 해당 읍·면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읍·면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100원 택시 이용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 100원 택시 이용권 전산화 ▲ 100원 택시 이용권(현재 1인당 한달 평균 4장) 확대 등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00원 택시 이용권 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원 택시는 2014년 처음 보성군 화순 2개군에서 시범 운영을 한 이후 2015년 순천시 등 14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했다. 이후 주민 반응이 매우 좋아 2016년 1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올해 37억8000만원 예산이 지원된다. 올 들어 4월말까지 22만7986명이 이용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 양로·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

### 입소자·직원 개별 설문

전남도가 양로·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 나선다.

전남도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314곳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점검과 학대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시설은 양로시설 18곳, 요양시설 193곳, 요양공동생활가정 93곳이다.

이중 4곳은 전남도와 중앙부처가, 192곳은 각 시군과 건강보험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태점검에 나선다.

나머지 116곳은 자체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중앙 부처에 제출토록 했으며 문제가 있을 땐 전남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입소자와 종사자

개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시설 운영기관의 음식물 제공의 적절성, 진료의 신속성, 신체적 제약의 최소화,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의 청결성, 수치심에 대한 배려, 개인 희망사항의 신속한 조치 등이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인학대 및 인권 유린사례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편사항이 접수된 시설은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시설 생활자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신고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통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안용훈(사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31일 회의를 열어 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최종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조세철 위원장 등 9명의 인사청문위원들은 그동안 대표로서의 자질 평가를 해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안 내정자가 건축직 공무원과 시 도시재생국장 출신으로 환경기초 시설 유지·관리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38년간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시·중앙부처와 관계, 조직경



영, 협업 등에도 성과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관련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 공로연수 1개월 전 이사장 후보로 내정돼 '낙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직운영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정례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이사장을 임명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월 라식센터  
4/5월 수술센터  
2/3월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